

민주당 경선, 해당 행위·유령당원 모집 철저히 검증해야

여야 각 정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자격심사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을 시작함에 따라 후보 적격 심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경우 탈당 전력이거나 과거 다른 정당 후보를 도운 해당 행위자, 그리고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원 모집 과정에서 '유령당원' 모집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당 이미지를 손상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

총선 D-76 '이런 후보 안된다'

다. 이런 가운데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도 주목된다.

예비후보들의 과거 전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경우 강간 등 파렴치 범죄 전과자들이 후보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다, 민주당 일부 예비후보도 음주운전 등의 경력이 있어 유권자들이 각 당 후보들의 경력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의 컷오프 배점 기준에 있어 적합한 여론조사가 40%로 가장 높다. 적합한 여론조사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 경선이 본선... "문제 후보에 페널티"

각 당후보들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등 자질 문제도 도마에

ARS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적합도 여론조사에 이어 정체성과 도덕성이 각각 15%의 배점을 차지하고 당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면접 점수가 각각 10%씩 적용된다.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려면 1위와 2위의 심사 총점이 30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선거구에서 불거진 유령당원 모집에 대한 민주당의 페널티 부

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광산갑 등 일부 지역구의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지난해 7월까지 신규 모집된 권리당원 중 무더기로 접수되거나 주소지 불명, 필체 동일 서류 등 9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A후보가 제출한 수백여장의 권리당원 입당원서의 경우 필체가 동일해 광주시당이 경고를 했다. 한 주소지에서 무더기 입당원서가 제출된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영남과 충청에 주소를 둔 유권

자가 광산갑 권리당원으로 입당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경쟁 정당의 당원도 버젓이 민주당에 입당원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과정에 거주유형별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 권리당원 자격을 다시 부여함으로써 불·탈법 등을 통해 모집된 일부 당원이 경선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광산갑 등지에서 반려된 9000여명의 권리당원 중 1500~3000명이 권리당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각 당의 경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자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전남 지역 예비후보 87명 중 38명(지난 16일 현재)이 전과기록이 있고,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전과기록이 4~8건에 달했다. 청소년 강간과 상해·폭행 등으로 실형을 받은 예비후보자들도 상당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을 비롯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선 후보자 적격 심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당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나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의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해선 컷오프를 포함한 강력한 페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신종 코로나 전수 조사 대상자 25명

교육청, 학교 위생교육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전수조사 대상자 중 광주·전남 거주자는 2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2·5·6면〉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우한 광항에서 국내로 들어온 3023명을 전수 조사해 증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166명으로 광주 거주자는 14명, 전남은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한, 후베이성을 최근 다녀와서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은 광주·전남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남 교직원 1명이 최근 우한 공항을 경유,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5개 자치구와 경찰, 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관계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6개 반, 122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운영하고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접촉자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선별 의료기관 6곳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2곳(12병상)을 재정비하고 접촉

자 격리시설(소방학교 77실), 다중 이용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자치구는 농동감시자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와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사회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건강 보험 수신자 조회,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환자는 신속히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치 추적에 협조하고 응급 환자 이송과 격리 환자 이탈 지원한다.

전남도도 사군 방역대책반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격상하고 선별 진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국립 목포검역소와 연계해 입국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 기관 호흡기 질환자 관리와 예방 수칙 홍보에도 나선다.

광주와 전남 교육청은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원아, 학생, 교직원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도록 했다. 각급 학교에 학생, 교직원들의 손 씻기 등 위생 교육 강화를 요청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리와 긴급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선포식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출범식이 29일 오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AI 도시 광주, AI 강국 견인"

광주, AI 중심도시 전략 선포 10년간 1조 투입 대대적 육성

광주시가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AI 강국 대한민국'을 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10년간 국비 등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AI 인프라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술을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광주 3대 중심 산업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융합해 AI 중심도시 광주를 키워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5면〉 광주시는 29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용섭 시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 주요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AI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과 2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함께 만든 AI 사업 컨트롤타워인 'AI산업

융합사업단'도 이날 출범했다.

이 시장은 이날 AI 클러스터 사업 비전을 '의향 광주를 넘어 AI 광주시대로!', 목표는 'AI 중심도시 광주(AI Hub City Gwangju)' 그리고 3대 가치로 ▲사람중심 ▲공유와 개방 ▲광주형 AI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4대 추진전략으로 ▲AI 클러스터 조성 ▲광주형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AI인재 양성 ▲시민참여형 AI 도시 만들기를 제시했다.

중점 과제로는 세계적인 AI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AI 집적단지 조성, 데이터센터 구축, AI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데이터 산업융합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AI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앞

으로 10년간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우선 2024년까지 5년간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3지구 4만6200㎡ 부지에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집적단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갖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국가균형발전, 상생 도약의 새해를 밝힙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